

현장에서 영재교육 안착, 이제는 내실화 다질 때

글 | 김미숙 _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소장 meek@kedi.re.kr

여러 국제비교 연구결과들은 평균화정책의 큰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공교육이 전체학생들의 평균적 학업성취 수준을 최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성과를 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체제는 영재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계발하고, 특별히 현대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생산성을 갖춘 우수인재로 양성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과학영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최초의 과학고등학교인 경기과학고등학교가 1983년 설립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과학고등학교는 일반학교와 구분하여 과학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뛰어난 과학적 소질을 계발하여 주고, 과학에 뜻을 가진 우수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이공계 진로를 개척하게 함으로써 장차 첨단 과학기술경쟁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문교부고시 제87-3호, 1987)는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출범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9개의 과학고등학교와 1개의 과학영재학교 등 총 20개의 고등학교급 과학영재교육기관이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보고서' .. 영재교육 강화 제안

과학영재교육을 포함해 영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대통령보고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5·31 교육개혁보고서'는 '각 분야별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를 개발·적용하여 영재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고, 영재가 영재로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규 학교내의 영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을 통한 영재교육을 활성화하며, 연구소 또는 대학에 영재교육센터 설치·운영을 지원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영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하였고, 전국적으로 영재교육 시범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영재반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편 법률적 기반 수립을 위해 2000년 1월 28일 이상희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국회가 주도한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1년 5월 7일 대통령이 주재한 '인적자원관계 장관간담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상해온 영재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국무위원들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9월 19일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 장관 명의로 제출된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관계부처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정치 작업을 거쳐 2002년 4월 18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영재교육이 공교육 체제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2년 11월 29일 제13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안)을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특허청 등 7개 관련 부처 공동 명의로 상정하여 확정지었다. 이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영재교육 추진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평균화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 제기에 따라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이 2004년 12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현재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으로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세 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과학고에서 전환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비롯하여 이들 영재교육기관에서 제공

하는 영재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주로 수학과 과학 영재교육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과학영재교육 추진 경과를 살펴볼 때, 과학영재 발굴·양성을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영재교육진흥법상 영재교육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일이다.

창의적 인재가 21세기 국가경쟁력 좌우

제도권하에서 공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재교육의 일반적 목적은 크게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측면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개인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의 영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이유, 즉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활용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의 이유는 현재의 일반 학교교육 체제하에서 충분히 도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사장 당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헌법의 교육기본권에 충실하고, 그 결과 우수인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은 정부가 선도적 지식국가로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인적자원의 핵심인 사람과 지식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한 4대 영역 16개 분야 중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영역의 한 분야인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인재 양성이 필요하겠지만 영재교육의 초창기부터 정책의 초점이 특별히 과학기술분야의 인재 양성에 맞추어졌다. 이는 수학, 과학, 정보과학 영재반 학생들이 전체 초·중·고 영재교육대상자 4만1천536명 중 3만8천103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나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이 보다 영재성 발굴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영재학교는 국가차원의 집중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이공계 분야 소수 정예 영재의 창의성 계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영재교육 강화사업 성공적 안착 평가

영재교육의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았을 때 우선 양적으로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2002~2007)과 수월성교육종합대책(2005~2010)에서 제시한 목표들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우선은 영재교육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대상자 약 4만 명(0.5%), 영재교육기관 500여 개 설립, 영재교사 8천 명 이상 연수, 교수학습 자료 150여 종 개발 등이 최근 4년 동안 이루어졌다. 질적 수준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어서 수요자 만족도(5점 만점에 학생, 학부모, 교사 평균 3.61점, 약 72%)를 통한 성과평가 결과, 일반학교 수요자 만족도 수준 약 60%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발표 이후 추진한 국가 영재교육 강화 사업이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향후 지속적인 영재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학습자의 필요와 특성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은 새로운 형태의 학습혁신 모형을 제공하고 있어 개인차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7차 교육과정과 수준별 학습 시행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것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입시 위주로 왜곡된 현 과학영재교육 바로잡아야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교육은 또한 많은 주요 해결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과학영재교육 왜곡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형평성 논쟁, 입시위주 사회풍토 등으로 영재교육이 본질에서 왜곡될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영재성이나 창의성 계발보다 대학 진학 혜택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영재교육을 희망하고, 그에 따라 입시에 도움이 되는 학교성적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고 요구하는 모습들이 간혹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현장에서 관찰된다. 또한 과학영재의 발굴·육성이라는 설립취지상 과학고를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본다면, 입시부담으로 인한 과학고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은 심각한 수준이다. 즉 대학 입시에서의 이점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있는 조기졸업과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는 전문 심화교과과정을 2학년 1학기까지의 단기 압축 형태로 무리하게 운영함으로써 이수를 위한 최소 기준만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2학년에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이 60~70%를 차지하는 현상은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재편 필요성과 과학고 대입전형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둘째는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영재 선발도구 개발 및 제도 개선의 과제다. 현재는 영재성 발굴에 대한 관심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선발을 강조함으로써 미래 잠재 가능성이 높은 타고난 영재를 발굴하기보다는 사교육 선행학습으로 다져진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필고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발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발방식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현재의 선발방식은 영재교육대상자의 특성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타고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으로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발제도의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 영재교육 영역의 편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영역을 다양화해야 한다. 영재교육의 영역과 영재교육대상자가 수학, 과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공계 영재들에게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는 이공계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아직은 어린 이 영재들에게 다른 학문의 세계를 접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또한 많은 성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너무 어려서부터 이공계 분야 학생들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편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여 장차 사회 진출시 대안적 진로 탐색이나 폭넓은 대인관계, 인적 협력망 구축 등에 있어 많은 제약과 불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초·중등학교 과정은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과학영재들을 예술이나 인문사회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다양한 재능을 보이는 영재들과 함께 한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예가 많다.

영재교육기관간 연계, 우수교원 확보 등 시급

넷째, 영재교육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이다. 현재와 같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 교육과정과 별도로 제공하는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의 영재교육은 학교교육과 유리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교사 수급이나 시간 및 장소의 제약 등으로 1% 이상으로 확대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확대 측면에서도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영재교육이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즉 고등학교급 과학영재교육기관의 부족으로 과학 영재교육의 병목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의 교육이 실질적인 영재교육이 되게 하고 대학에서 이를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선이수(AP) 제도 등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흡한 교사 지원체제 강화와 우수교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에 있어 우수교원의 확보는 누구나 강조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부족과 교원전보제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심의 인사구조로 인하여 영재담당 우수교원의 양성·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재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영재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영재교육전공 대학원 과정과 연계, 교사자격증이 없는 박사급 전문 인력의 공채 등 임용·연수 과정과 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영재학생과 교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가정 및 학교 환경에 대한 자료가 장기간 종단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영재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연구물, 안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부처, 영재교육원,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을 모두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는 종단적 자료를 통한 보다 정밀한 기초연구와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입안을 가능케 해줄 뿐 아니라 영재교육 관련자들의 범국가적 연계를 통해서 영재교육 실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재조성할 단계에 와 있다.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2007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이 공포될 것이다. 제1차 계획의 주된 목표가 영재교육의 성공적 안착이었다고 한다면, 제2차 계획은 영재교육의 내실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고 활성화를 위한 영재학교의 바람직한 모형 제시, 영재담당 교원 양성·임용·연수·배치·인센티브 도입,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수월성 추구 학교교육과정과 영재교육의 횡단적 연계성 확보, 초-중-고-대학 전단계에 걸친 영재교육의 종단적 연계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부분의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67



글쓴이는 워싱턴주립대학교 객원조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명지대 겸임교수로 있다.